장애인 그룹홈, 인권침해·부실운영 심각

광주시 56곳 중 30곳 점검
바가지 입소료·인스턴트 끼니
돈벌이 악용 사례도 다수 적발
市, 행정처분·개선 명령

#1. 광주의 A 장애인 그룹홈은 장애인의 개인 돈을 그룹홈 관계자가 맘대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장애인의 사생활에 개입했다. 또 주거환경은 비좁고 열악했으며, 인스턴트 위주의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2. 광주의 B그룹홈은 정부 보조금을 인건비로 받는 종사자가 다른 시설에서도 일을 하며 월급을 이중으로 챙기고 있었고 장애인을 돌보는데도 불성실했다. 또 그룹홈 시설운영위원회에 시설 소유자 가족이 참여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는 챙겼다.

광주지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의 인권침해와 부적정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56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3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 내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이다.

시설당 1~2명의 종사자가 4명 이하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 7월 현재 광주에는 총 56곳의 공동생활가정에 22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입소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이를 장애인의 식사·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자산취득과 같은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 불성실 사례,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족이 참여하는 형식적 운영 사례,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청구하는 부정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에서 1~2건씩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절 사례를 분석해 사안별로 행정처분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단'(TF)의 제안을 토대로 운영 방안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최소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공동생활가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광주시 전인근 장애인복지과장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기획단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초복 앞두고 닭 유통업체 위생점검 10일 광주 북구청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초복을 일주일 앞두고 일곡동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작업장 관리와 제품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5·18 유혈진압 최웅·신우식 등 7명 표창 박탈

부적절 서훈 취소안 의결
형제복지원·간첩조작 사건 등
53명·2개 군부대 서훈 취소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최웅 11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 취소된다. 그동안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모두 박탈했지만, 표창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박탈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서훈취소 대상은 5·18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군부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1명,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구체적인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서훈은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5·18 진압 관련자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이번에 취소된 5·18 관련자·단체는 최웅 당시 1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신우식 7공수특전여단장(준장), 장윤태 31사단 소속 중령, 육군특전사령부·20사단(이상 대통령표창), 오의근 3공수 소속 대위, 안부웅 11공수 중령, 권승만 7공수 중령, 김정수 20사단 일병(이상 국무총리표창) 등이다.

5·18 관련 훈·포장 68점은 지난 2006년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모두 취소했지만,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 육군특전사령부 등 2개 단체와 군인 등 7명에게 1980년 6월 20일 수여된 표창을 박탈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교·병원·유치원 등 최대 10년간 취업 못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7 해짐 19:49 달뜸 03:22 달짐 17:49

불쾌지수 높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겠다.

광 주	맑음	24/33	보 성	맑음	22/29
목 포	맑음	24/31	순 천	맑음	23/31
여 수	맑음	24/29	영 광	맑음	24/33
나 주	맑음	24/33	진 도	맑음	24/31
완 도	맑음	23/30	전 주	맑음	24/33
구 례	맑음	23/33	군 산	맑음	24/32
강 진	맑음	23/30	남 원	맑음	22/32
해 남	맑음	23/31	흑산도	맑음	22/27
장 성	맑음	23/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6.5~2.0	동~남동	0.5~2.0
	먼바다	동~남동	2.0~3.0	동~남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먼바다(동)	동~남동	2.0~3.0	동~남동	1.5~2.5
	먼바다(서)	동~남동	2.0~3.0	동~남동	1.5~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50	00:13
	17:54	12:16
여수	01:16	07:20
	13:24	20:0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 높음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구름 많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24/34	24/34	24/34	24/33	24/33	24/33	24/34

식약처,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 판매·제조 중지

처방약 환불·교환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를 점검한 결과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조중지와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나머지 104개 품목은 판매·제조 중지를 해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7만 8536명이다.

문제가 된 115개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를 받는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에 가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환자 부담은 없다. 만약 재처방과 재조제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 법적 근거 마련 권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가 없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에는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1%)에 달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